

격동의 한국 농업 · 농촌의 미래

쌀 등 민감품목 예외 · 유예조치 하고 소득감소분 직접지불 방식으로 보전하고
도시민 마음 읽어야 부가가치화 가능, '농촌체류' 신 시민문화 장르되게 해야

선진통상국가 향한 질주

한국은 지난 40여년간 세계사상 유례없는 고도성장으로 1인당 GDP가 1960년대 초에는 100달러 수준이었으나 2005년에 1만6천달러로 150배 이상 증가하였고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보다 5~7배나 빠른 경제성장과 산업구조 변환의 문제가 농업 · 농촌에 퇴적되었고, 그 위에 1989년 BOP조항 졸업으로 촉발된 농산물 시장개방이 UR협정을 계기로 본격화되면서 농가경제를 더욱 압박하여 왔다

최근 농가의 평균소득 수준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78%수준에 머물고, 특히 영세 고령 농가의 소득이 정체되거나 도리어 감소 추세를 보여 농가 간 소득 격차가 대폭 확대되었다. 5분위 소득비율이 1994년 4.4배에서 2005년 9.3배로 증가하여 도시가구의 5.4배



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원장

보다 현저히 높아 저소득농가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통상'을 통해 선진국에 진입한다는 '선진통상국가' 전략 아래 2004년 이후 거대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힘겹게 발효된지 2년 만에 싱가포르, EFTA 4개국(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아세안 10개국 등 모두 15개국과의 협상 타결을 거쳐 현재 캐나다, 인도, 그리고 세계 최대 경제대국 미국과의 FTA추진으로 비약하고 있다. 미국과의 협상이 성공되든 혹은 실패하든 이제 곧 유럽연합(EU)과 협상이 시작되고 머지않아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일본을 포함하여 동북아시아 자유무역협정이 현안으로 제기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농업, 붕괴?

이상과 같은 세계화의 격랑 한 가운데서 한국농업은 붕괴될 것인가? 이 물음에 답하려면 먼저 자유무역협정이 몰고 올 관세감축의 충격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농산물 평균 관세율은 55%로서 일본의 24%, 중국의 38%보다 훨씬 높고, 100% 이상의 고관세 품목도 28개(쌀 포함)에 이르러 다른 어느 나라보다 현저히 많아 관세보호가 우리나라 농업의 존립조건인 듯이 보인다. 그러나 고율관세 품목 중 부가가치 규모가 2,000억 이상으로 농업 총 부가가치의 1%를 넘는 품목은 쌀 이외에 고추, 인삼, 마늘, 대두, 감귤, 양파, 우유 등 8개 품목에 불과하고 나머지 20개 품목은 녹두, 메밀, 생강 등으로 부가가치가 1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여 관세 감축의 영향이 우리나라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수요는 많으나 국내 생산이 거의 안 되는 사료용 옥수수과 착유용 대두 매니옥 같은 고율 관세 품목은 양허 관세와 관계없이 모든 수입량을 이미 저율 관세로 수입토록 하고 있으므로 관세 철폐의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다. 또한 저율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쿼터(TRQ)가 설정되어 있음에도 실제로 쿼터만큼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고구마, 밤, 잣, 감귤과 같은 품목은 관세가 실질적인 수입제약이 되고 있지 않다고 추정된다.

그 밖의 모든 과일, 채소, 축산물의 관세는 20~50% 수준이므로 관세가 철폐된다는 것은 수입 원가가 15~30%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최근 4년 사이 환율

하락으로 이 정도의 수입원가 하락은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수준이므로 관세 감축이 가격 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채소와 과일은 같은 국내산도 산지와 등급에 따라 도매가격에 몇 배 차이가 날 만큼 소비자가 품질에 민감하므로 수입 농산물의 품질과 맛이 국내산과 같지 않는 한 국내산을 대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포도와 감귤의 경우에 대체의 한계가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수입품이 국내산과 대체성이 높으면 국내산 농산물 가격과 동종의 수입품 가격은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 그러나 국내산 포도가격과 수입품 가격은 거의 상관관계가 없고, 국내산 감귤과 수입 오렌지 가격 사이에도 상관관계가 매우 낮아 대체관계가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우리나라 농업이 높은 관세에 의해 보호되고 있고 따라서 관세가 우리나라 농업의 존립조건인 듯이 보이지만 쌀 등 몇 개의 민감품목을 제외하면 관세감축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민감품목에 대해 예외 혹은 충분히 긴 유예기간을 확보한다면 자유무역협정으로 우리나라 농업이 치명적 타격을 받아 붕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유무역협정의 충격이 치명적이지는 않으나 우리나라 농업에 큰 영향을 주고 농업소득 기회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는 사실이다. 자유무역협정과 관계없이 2015년부터 관세화 되는 쌀의 소

득감소까지 고려하면 농업소득 감소규모는 2009년 1조7천억원, 2014년 3조7천억원, 2017년 4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정부는 모든 협상에서 쌀을 비롯한 초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예외 혹은 충분한 유예조치를 확보하고, 협상 타결 후에는 협정 이행과정에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여 농업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그 감소 부분을 직접지불 방식으로 보전하게 될 것이다. 보전 방식은 일단 쌀소득보전직불과 같은 품목단위로 보전 될 것이나 점차 농가단위 직불방식으로 발전될 것이다. 농업인은, 정부가 소득(명목)을 보장한다는 조건 아래 규모 확대와 품목별 조직, 조합, 지역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방안을 찾아

내는데 전념하게 될 것이다.

농산물의 신수요 신시장 폭발

소비자의 의식변화가 급진전되면서 선택 기준에 근본적 변화가 진행되어 가격, 양, 모양 중심에서 안전성, 품질 특성, 편의성, 건강성, 나아가 감성이 소비자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불만과 욕구를 통찰하여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추가적인 비용은 최소화하는 것이 소비자 가치를 높이는 것이며, 소비자 가치를 높이는 것이 경쟁력 제고의 요체가 될 것이다. 한국 농업은 이러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서 소비자에게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하는 산업이 되어 소비자를 열광시키며 의료산업, 의약품산업과 경쟁하는 산업이 될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상품화 과정이 역전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생산자가 생각하는 우수 농산물을 우선 생산하고 이것을 상품화한 후 판매경쟁을 하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상품화의 방향이 생산자 중심적 고품질화/선별/규격화/포장에 집중되어 비용은 상승하였으나 소비자 만족도가 그만큼 상승하지 못하여 판매처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먼저 소비자 가치를 파악하고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상품화계획을 수립한 후 그에 따라 생산함으로써 모든 상품화 과정이 소비자로부터 출발하게 되고 따라서 소비자 가치 파악을 위한 조사 연구가 매우 중요하게 된다.

한편, 과거에는 가격과 물량접근의 용이



성에 따라 유통채널이 결정되었으나 소비자의 필요와 요구를 신속 정확히 발견하여 상품에 반영할 수 있는 유통채널이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유통채널이 도매시장 중심에서 대형슈퍼 중심으로 그리고 다양한 산지-소비자 직거래방식으로 변화되고, 새로운 유통채널은 균일성, 적시·적량 안정공급 능력을 필수조건으로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조직화가 필수적 요건이 될 것이다. 산지는 소비자에 대한 조사 연구로 소비자의 요구를 신속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규모화로 소비지 대형 소매상에게 적시에 적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상품의 품질을 항상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 품질관리시스템을 확립하고 있어야 한다. 아무리 대농이라도 이러한 요건을 개별 농가가 충족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므로 조직화가 필수적 요소가 된다.

조직화는 지역농협 중심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지역농협이 출자한 독립법인이 중심이 될 수도 있으며, 소비지 유통기업 혹은 산지의 유능한 농가가 중심이 되어 수직통합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조직화는 유능한 CEO의 확보가 성패의 관건이 되며 CEO는 내부인력일 수도 있으나 유능한 외부인력을 영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케팅조직과 농가 사이의 관계는 계약재배방식이 활용될 수도 있고 수탁방식이 이용될 수도 있으나 점차 계약재배 방식이 주류가 될 것이며, 몇 개의 농가가 생산단위로 조직화 되어 조직력을 높이게 될 것이다.

농촌공간에 대한 수요 폭발

국민의 생활양식과 가치관이 빠르게 변함에 따라 쾌적한 여가, 휴양, 관광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해외 관광의 급증은 이러한 수요 폭발을 반영하는 것이며 70~80년대 일본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농촌공간이 아름답고 안전하며 그 지역의 문화와 농업과 연계되어 즐거움과 건강이 있는 공간이 된다면, 농촌지역에 여가 수요가 크게 늘어 농촌은 새로운 부가가치 공간이 될 것이다.

유럽의 관광수요 중 20%는 농촌관광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 농촌관광산업은 연 10% 이상 성장할 것이다. 많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신선한 농산물의 이용, 자연관찰과 체험에 의한 육체적·정신적 재충전, 아름다운 농촌경관을 즐기는 휴식, 개성적인 지역문화와의 만남, 도시에서와 다른 슬로우 라이프에 매료될 것이다.

그러나 농촌공간이 부가가치 창출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도시민이 농촌공간에서 무엇을 진정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통찰이 전제되어야 한다. 농산물의 상품화가 소비자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출발하여야 하듯이 농촌공간의 부가가치화도 소비자인 도시민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 농촌공간이 생산 공간 이상의 문화공간화 되고, 농산물은 먹거리 이상의 문화상품화 되며, 농촌체류가 새로운 체험 문화가 되어 농촌에 체류하면서 체험하고, 소비하고, 휴식하는 것이 새로운 시민문화의 장르로 정착될 것이다. Y